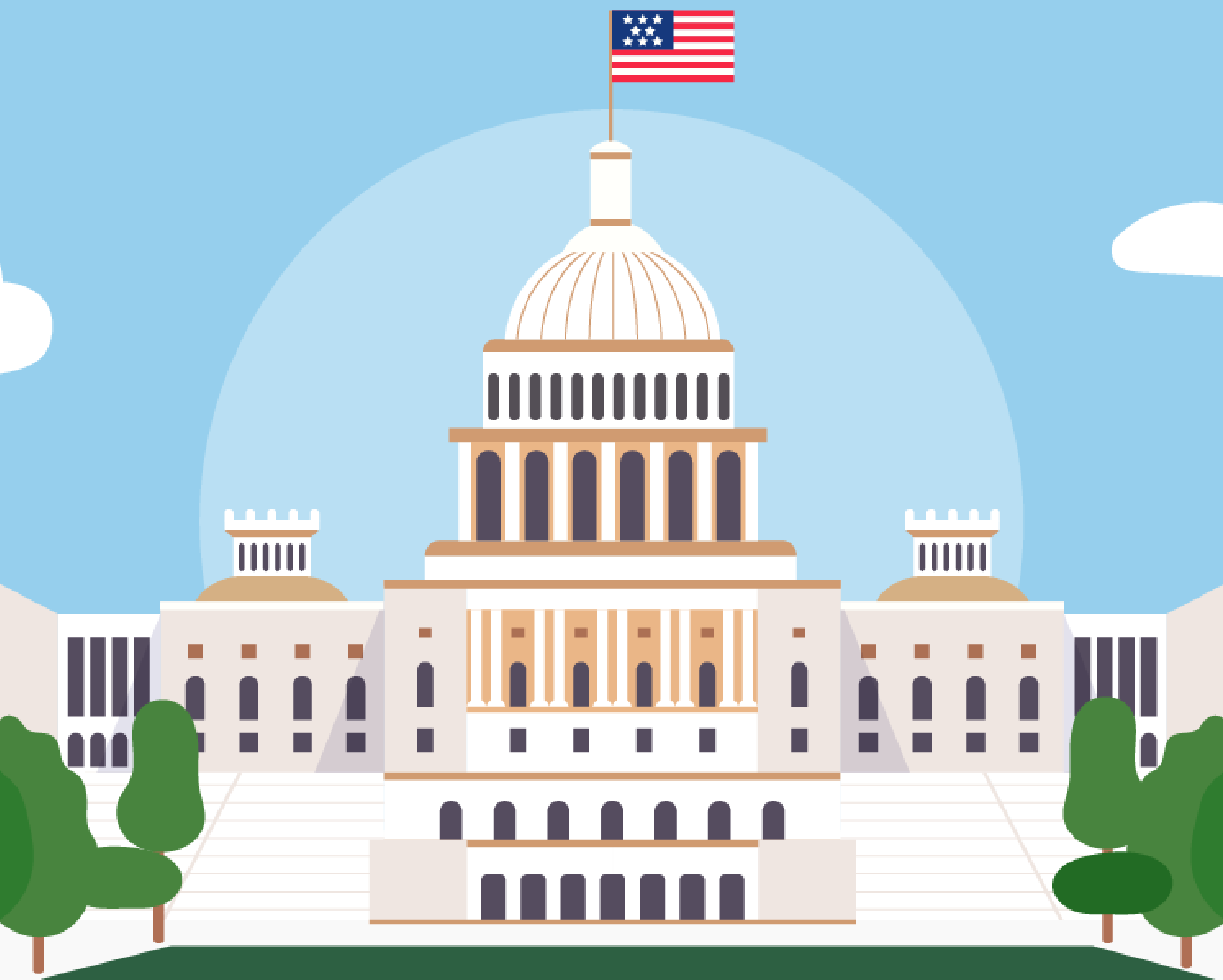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

트럼프 행정 조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트럼프 행정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25.1.20) 40개가 넘는 대통령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에 서명하고, 이후 2월 1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I will act with unprecedented speed and determination to resolve every crisis our nation faces

1

경제 및 통상
(America First Trade Policy)

2

에너지 및 환경
(Unleashing American Energy)

조치 내용

즉각 시행 가능

-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협상중)
- * 대상국, 세율, 대상 품목 지속 확대 중

- 경제안보 및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지시
-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검토 지시
- FTA와 WTO 협정 재검토 지시
- 대외수입청 설립 검토 제안

-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
→ 휘발유 차량 판매 제한 규정 폐지
- 그린뉴딜 정책 시행 중단
→ IRA와 IJA 법안으로 승인된 자금 집행 중지
- (파리기후협정 탈퇴)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탈퇴 선언.
- (에너지 독립 강화) 석유·가스 탐사 확대,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예: Keystone XL 파이프라인).
- (환경 규제 완화) NEPA(전국환경정책법) 검토 요건 완화로 대규모 프로젝트 승인 속도

3

기술 및 첨단 산업

4

이민 및 국경 보안

5

사회 및 문화

조치 내용

- (AI 리더십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혁신) 암호화폐 규제 재검토 및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
- (사이버 보안 강화)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 남부 국경 보안 강화 및 침입 차단 (미군과 주 방위군을 남부 국경에 배치)
- 출생 시민권 제한
- 망명 및 난민 정책 제한 (망명 신청자는 입국 전 제3국에 대기)
-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불법체류자 체포 구금, 고용시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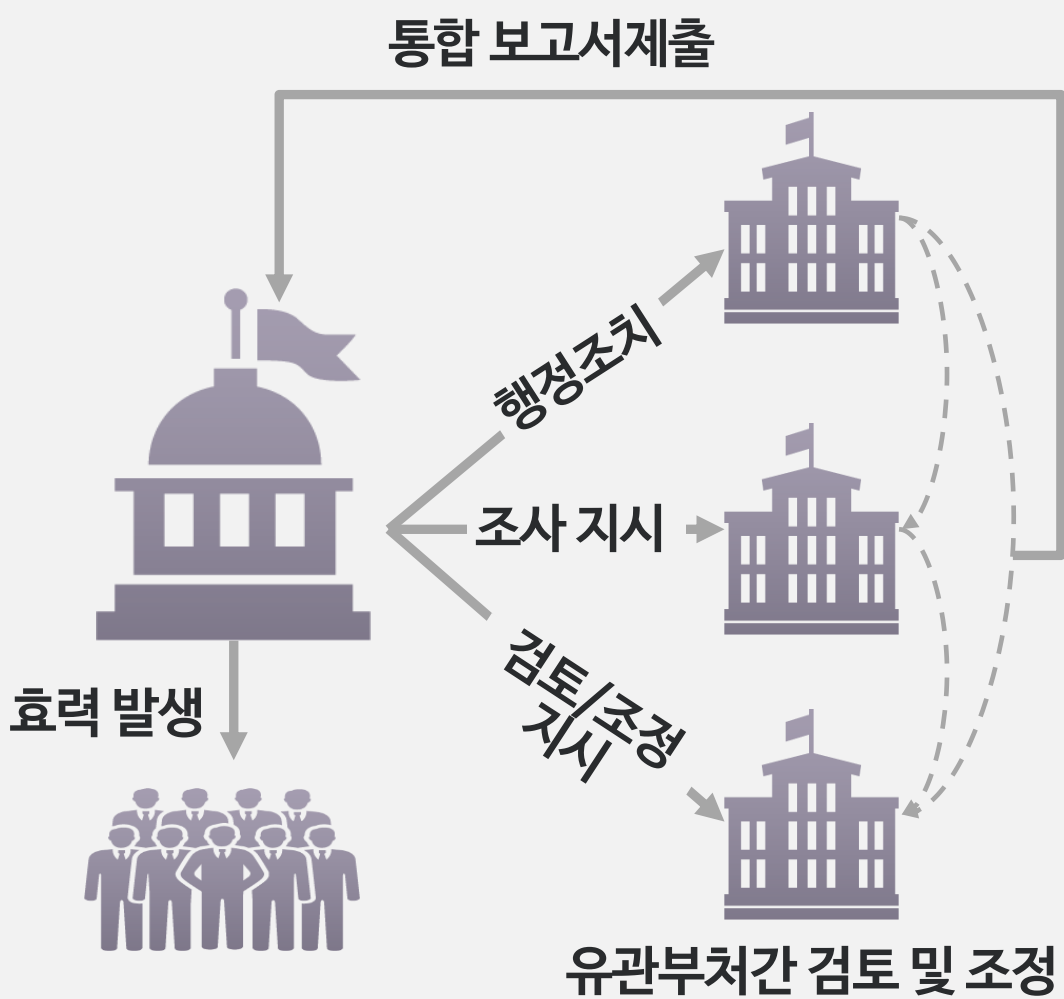
- (연방 DEI 프로그램 철폐) DEI를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규정
 - 모든 연방 기관에서 DEI 관련 사무실, 직책, 프로그램 폐지
- (정부 효율부 신설)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수장으로 신설
 - 연방정부 직원의 대면, 전일제 근무 지시 및 인력 최적화 지시

경제 및 통상, 에너지, 첨단 기술, 이민제한 및 사회문화적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존 정책들을 철회하거나 대체

트럼프 행정 조치 시행 전망

트럼프의 행정조치는 헌법과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며, 일부는 즉각 시행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 조치(조사 및 재검토 지시) 시행 과정



- ① 대부분의 행정 조치는 관련 부처(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관리예산실 등)로 전달되어 조사와 재검토 실행
- ② 유관 부처들은 **2025년 4월 1일 또는 4월 30일까지 조사와 재검토**를 완료하여 대통령 권고안을 포함한 통합 보고서 제출
- ③ **4월 30일 이후**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의 방향 결정
- ④ 예외적으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한 관세 부과**의 경제적 조치는 **대통령 행정조치로 즉각 발효**, 연방 기관(예: 세관 및 국경보호청, CBP)이 이를 즉시 집행 지시 가능

트럼프 행정 조치의 즉각 시행 가능성

IEEPA와 NEA 활용

-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국제 경제 거래를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제공
- NEA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관세 부과 조치가 즉각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법적 도전과 지연 가능성

- **(행정절차 준수)**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 기관의 규칙 제정, 보고서 작성 또는 추가 지침 등이 필요
 - DEI 프로그램 철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만 완전히 시행 가능
- **(법원의 명령)** 법원이 관세의 합헌성 검토 후 긴급 금지명령 시행(가능성 낮음)
 - (금지 명령 사례)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은 법원에서 즉각적으로 차단
- **(국내 경제적 영향)**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과 경제적 부담시 정책 재검토 고려

행정 조치내용 및 대응 현황 (1/5) - 관세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 조치에 대해 각국은 보복 조치를 통해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동시에 협상을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	對 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행정 조치	
	각국 대응 현황	각국 대응 전망
10%	중국 • (보복관세 부과 발표)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차량 등에 10% 관세를 부과 • (WTO 제소)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소 • (비관세 조치 강화) 희소 금속(텅스텐, 인듐 등) 수출 통제 및 구글 등 2개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	미국의 관세 압박 동시에 협상 촉구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긴장 완화 모색
25%	캐나다 • (보복관세 부과 발표) 미국산 수입품(음료, 화장품, 종이 제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 발표 → 미국산 제품 1550억 캐나다 달러 (약 1150억 달러) 규모 • 주정부 차원의 미국산 제품 구매 제한 권고 • 특정 주류 제품(미국산 맥주, 와인 등) 판매 중단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규정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철회를 요구할 계획
25%	멕시코 • (보복관세 부과 발표) 미국산 수입품(돼지고기, 치즈, 신선 농산물, 철강)에 25% 관세 부과 발표 • (관세 시행 유예 합의) 밀매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위해 국경 경비병력 1만명 배치 약속 → 관세 시행 한 달간 유예 합의	멕시코 정부 "플랜 B"라는 비상 계획 수립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국가 안보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 협상결과에 따라 즉각 발효 또는 유예 중

행정 조치내용 및 대응 현황 (2/5) - 에너지 및 환경

국내 에너지 생산 촉진, 환경 규제 완화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에너지 및 환경 (Unleashing American Energy)

-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지만 환경 보호와 청정에너지 전환에는 역행하는 경향

행정 조치 사항

에너지 탐사 및 생산 확대	• 미국 에너지 독립 명령(Unleashing American Energy) - 석유·가스 탐사 확대,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예: Keystone XL 파이프라인) - 알래스카와 같은 지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확대 지시 - 희귀 광물 등 비연료 자원의 채굴/가공 촉진 지시 명시
환경규제 완화	• 행정부의 탄소 감축 규제 및 전기차 의무 판매 정책 철회 • 가전제품(샤워기,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도 완화 •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제한	• 풍력 발전 임대 및 허가를 일시 중단 및 기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재평가 지시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JA)에서 승인된 청정 에너지 지원금 동결 및 축소
단기적 영향	• 미국 내 단기적으로 에너지 산업 성장 및 화석연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 • 미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 지연 및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장기적 영향	• 미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저해, 청정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중국과 유럽 대비 경쟁력 약화 •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행정 조치내용 및 대응 현황 (3/5) - 기술 및 첨단 산업

트럼프 행정부의 이 행정조치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협력과 소비자 보호 문제 및 금융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술 및 첨단 산업

[주요 행정 조치]

AI 리더십 강화

- (AI규제완화) AI 개발과 배포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
- (AI 행동계획) AI 시스템이 사회적 의제의 영향 받지 않도록 설계
-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폐지(e.g., 틱톡금지연기)

첨단 기술 투자

- 양자 컴퓨팅 및 생명공학을 "변혁적 기술"로 지정하고 민간 협력 강조
- (스타게이트) AI 인프라와 컴퓨팅 역량을 확장하는 계획 발표
- 기존 규제 중 첨단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

디지털 금융 활성화

-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합법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시
-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 그룹 설립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감독하도록 지시

(Pros.) 혁신의 촉진

- (기술 혁신) 규제 완화, 정책 일관성과 기술 중립적 접근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혁신 가속화
- CBDC 금지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보호
→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
-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부문에서 중국과 유럽에 비해 경쟁 우위 확보

(Cons.) 국제협력 약화

- CBDC관련 국제 협력 거부로 글로벌 국가들과의 금융 기술 협력이 약화
- 글로벌 AML(자금세탁방지) 및 KYC(고객확인) 규제와 충돌할 위험
-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중
→ 사기 및 불법 활동 우려 증가

행정 조치내용 및 대응 현황 (4/5) - 이민 및 국경 보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국경보안 관련 행정조치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시행됐으나, 인도주의 및 헌법적 문제로 인해 국제적 비난, 사회적 논란 및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4 이민 및 국경 보안

[주요 행정 조치]

국경 보안 강화	• (국가비상사태 선언) 남부 국경을 "침략" 상태로 규정하고, 군대와 국경 순찰대를 배치해 국경 보안 강화 • (물리적 장벽 건설 재계)멕시코 국경에 물리적 장벽(“Border Wall”) 건설 재개, "완전한 작전 통제"를 달성하려는 목표 수립
이민 제한	• (난민 및 망명 제한) 망명 신청 절차 대폭 축소 및 "Remain in Mexico" 정책 재도입 • (출생 시민권 폐지)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 제한 • (비자심사강화) 고위험 국가 출신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
불법 체류 추방 공표	•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 • 지역 경찰과 협력해 불법 이민자 체포와 단속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

(Pros.) 공공재정 부담 완화	(Cons.) 사회적 긴장 증가
•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감소 • 국경 통제력을 높이고 불법 입국 시도 억제 → 마약 등의 도시 범죄율 완화 • 특정 산업의 자국민 일자리 보호	• 망명 절차 축소와 난민 프로그램 중단은 인도주의적 약화로 국제적 비판 초래 • 대규모 추방과 지역 경찰 협력 확대는 이민자의 공포와 불안 조성 → 사회적 분열 심화

행정 조치내용 및 대응 현황 (5/5) - 사회 및 문화

트럼프 행정부의 사회 및 문화 관련 조치는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보수층 지지를 강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 심화, 행정 서비스 약화를 초래하며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사회 및 문화

행정 조치 사항

DEI 프로그램 철폐	• 모든 연방 기관에서 관련 사무실, 직책, 프로그램 폐지 • DEI 관련 예산, 계약, 성과 평가 기준 철회 • 성별을 생물학적 정의로 한정, 트랜스젠더 관련 보호 조치 철회
정부 효율부 신설 (Dept. of Government Efficiency)	• (DOGE 신설) 공식적인 연방 행정각부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의 한 형태 • (원격 근무 정책 종료) 연방 정부 직원 230만 명 중 원격 근무 가능 인력 약 110만 명에게 전일제 대면근무 지시 • (정부 인력 최적화) 퇴사자 4명당 1명만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 및 자발적 퇴사 유도

단기적 영향	장기적 리스크	사회 및 경제적 변화
• 연방 예산 절감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사회적 반발과 법적 논란 초래 • 일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증가 • 보수층 지지 결집	• 연방 공공 서비스 품질 저하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약화 • DEI 폐지로 사회 불평등 심화와 국제적 비판 초래	• 민간 부문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확산 → 기업 내 DEI 약화 위험 • 대면근무 강제는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 증가 • 사회적 차별과 갈등 초래

향후 대응 방향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 및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무역 규제 및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할 기회 탐색

-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노력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
-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 高

미국 무역정책 방향 예측 및 대응책 마련

-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 덤핑 마진 계산 방식(제로잉) 재도입과 같은 조치가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 가중
- 관세 컨설팅, 통관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부 무역금융(366조 원 규모) 등의 가용 여부 검토 및 활용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대비

-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를 포함한 기존 무역협정을 검토하고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 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요구 가능성 高)

산업별 영향 분석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 중국산 배터리 및 원자재(리튬, 코발트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
 - 중국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 → 한국 제품의 점유율 확대 기대되지만, 원자재 확보 비용 상승 우려
- (반도체) 대중국 규제 강화 →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
 -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철강·알루미늄) 한국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高 →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의 시장 다변화 전략 필요
- (공급망 다변화)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 확대로 관세 부담 완화 및 동남아시아나 인도를 포함한 원자재 확보 채널 다변화 추진

Business Contacts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전문가들은 산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혁신과 통찰력을 결합하여 고객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와 긴급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은 반덤핑, 관세, 이전가격, 국제조세 및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업무경험을 통해 기업이 국제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산업 전문가 (Industry Leaders)



손재호 대표
성장전략 부문(Growth) 리더
Tel : 02 6676 2502
E-mail : jaehoson@deloitte.com



최호계 파트너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리더
Tel : 02 6676 3227
E-mail : hogchoi@deloitte.com



김태환 파트너
소비자 산업 리더
Tel : 02 6676 3756
E-mail : taehwankim@deloitte.com



한동현 파트너
에너지 산업 & 정부 및 공공기관 리더
Tel : 02 6676 3015
E-mail : donghyuhan@deloitte.com



장형수 파트너
금융산업 리더
Tel : 02 6676 1168
E-mail : hyuchang@deloitte.com



편제성 이사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리더
Tel : 02 6676 1979
E-mail : jpyeon@deloitte.com

딜로이트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배두용 리더
통상&디지털통합서비스그룹 리더
Tel : 02 6099 4847
E-mail : doobae@deloit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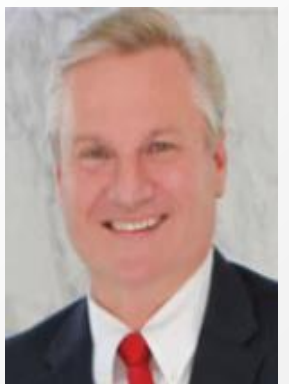
심종선 이사
국제통상자문 리더
Tel : 02 6138 5045
E-mail : jonshim@deloitte.com



유정곤 파트너
관세자문 리더
Tel : 02 6676 2561
E-mail : jyou@deloitte.com



이용찬 파트너
이전가격자문 리더
Tel : 02 6676 2828
E-mail : yongdee@deloitte.com



Scott Oleson 파트너
국제조세 리더
Tel : 02 6676 2012
E-mail : scoleson@deloitte.com



심윤수 이사
규제 리스크 자문 리더
Tel : 02 6676 3376
E-mail : yunshim@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배순한 Director

soobae@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 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